

(2026. 2. 9)

## 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 보도자료

<2026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연구회는

국회 의원회관 10 간담회의실에서

박수영 국회의원과 함께 12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민연금 스투어드십 코드 강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입니다.

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 관련 제반 사항은

연금연구회 공식 홈페이지([www.pensionfutureforum.org](http://www.pensionfutureforum.org))

성명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표자 보도자료>

### 1.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장 (전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가? -

스튜어드십이 안착한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만 연금사회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선진국에 유례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구성에 비전문가인 정부위원 비중이 과다한 것에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인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도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권 성향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과 중립성 논란에 시달리는 수책위는 해산함이 마땅하고, 일본식의 기금 운용을 외부의 독립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민간기구화하는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토론자 보도자료>

### 1. 김대영 세무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청년세대 대변)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독립 기구화와 의결권 행사의 민간 위탁 및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 2. 김민정 청년 (서울대 정책학 석사 과정,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청년 대표, 국회 미래연구원 전 청년미래위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실행 조건이 먼저다. 해외와 다르게 정부 영향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주주권 행사를 확대할 경우, 정책 기조가 투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의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정부 부처 장관과 각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 지침, 자산 배분, 성과평가와 같은 고도의 사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응답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주권 행사를 정부로부터 분리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 3.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논의는 단순한 의결권 지침 개편을 넘어, 공적 연금금이 ‘시장 참여자’인지, 아니면 ‘정책 집행자’인지라는 제도적·헌정적 위상을 둘러싼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스튜어드십의 목적은 ESG 실험이나 정부 정책 수단이 아니라 수익자 이익과 장기 수익률 극대화에 있어야 하며, 일본 GPIF 및 영국 사례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규범 중심 설계가 핵심 원칙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권한 확대보다 재무적 기준 명문화, 의사결정 독립성 강화, 공시·사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엄격히 제한된 수탁자 책임’ 범위 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민동환 청년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정부가 국민연금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 자율성

침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남용하는 정책을 멈추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추진해야 한다.

## 5. 박준영 청년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전공)

코드 인사 9명이 코스피 시총 5%를 들고 600개 기업에 손대겠다는 발상은 자의식 과잉으로 비춰질 뿐이다. '내 돈처럼' 쓰라고 했지 '네 돈처럼' 쓰라고 하지 않았다.

## 6. 오철 교수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이미 1,400조가 넘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KB금융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고, 지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해도 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기금은 한국 주식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동체 번영 및 환경사회가치 구현을 위한 성선설에 입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게 '공동체 번영 및 환경사회가치 구현을 위한 성선설을 행하라'는 완장을 채워 그 권한을 위원회에 준다면,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 특히, 위원회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작용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문제를 들어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과거 국민연금의 한진KAL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사례 등 여러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해당기업의 기업 가치와 무관하고, 오히려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개입은 제어되어야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 7.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김상철 교수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것 같다. 그동안의 운영 과정과 내용을 평가해 볼

때, 너무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다 보니 이런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하게 된 것 같다. “투명한 기업 운영을 통한 주주가치 및 수익성 제고”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이 시급하다. 환율 방어, 주가 부양에 추가하여 기업 감시의 역할까지를 국민연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왜? 생겨났겠나? “탱자가 아닌 원래의 굴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8.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국민연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노후의 문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책임 강화를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차별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